

■ 반민주·친일과 대거 국립묘지 안장 되풀이 왜?

현행법상 막을수 없고 과거 청산도 미완성

내란 범죄·부정부패 사범도 묻혀... 특별법 제정 등 범제정비 해야

지난 8월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씨가 국립 대전현충원에 기습적으로 안장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사반란인 12·12사태 관련자들뿐 아니라 친일인사들이 대거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진압과 관련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관련 인사들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유죄가 확정된 내란·외환 범죄자도 현행법상 안장 배제 사유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현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16명 중 14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사들을 합치면 친일 의혹을 받고 있는 안장자는 모두 76명이나 된다. <역사 미청산·법 미비 원인>=박찬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현재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 선양하는 곳이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일정한 지위 이상의 기득권을 유지한 이들은 자동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자 심사 기준을 엄격히 하고 특별법 제정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 연구원은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장 반대 단체 활동 개시

광주인권운동선터와 민족문제연구소,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친일·반민주인사 국립묘지 안장반대 시민행동’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행동에는 아시아 인권단체와 광주인권상 수상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뇌물수수혐의 선재성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무죄 무리한 기소냐, 면죄부 판결이냐

판결 놓고 논란 일 듯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무죄 선고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인 반면, 검찰 측은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선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이중 핵심은 주시투자를 매개로 한 뇌물수수였다.

따져보면 이번 무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해당 판결문을 검토해 혐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검찰, 피고인 중 어느 쪽의 증거를 믿느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지나치다”며 “검사가 사건 관련자에게 친구인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한 것을 감독에 관한 문제로 미화할 수 있겠느냐”라며 반발했다. 광주지검은 또 “상급심으로 가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직 고위법관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선고결과는 예상을 빚다가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공판과정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며 검찰 내부에서도 유·무죄 판결을 놓고 전망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는지,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였는지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다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국감 현장

-광주지방국세청

29일 진행된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의식한 듯 근로장려금(EITC)의 문제점을 따진 뒤 적극적인 홍보와 확대 시행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 대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29일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호남지역의 법인·개인사업자·근로자 소득이 전국 최하위라는 사실을 보도한 이날자 광주일보를 제시하며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지적한 뒤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대기업 납세 감시 강화·박람회 세정지원 해달라”

“대기업 납세 감시 강화해라”= 민주당 동당 이정희 의원은 “광주신세계가 지난 1995년 5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뒤 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주주에게 100억원 이상이 현금배당 됐다”며 “전국 구매라인과 특수관계 거래를 통해 또 다른 ‘일감몰아주기’ 등이 우려되는데 광주청의 세금 감사가 필요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개정안에 적극적 의견을 피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이 GS칼텍스와 70억원 세금부과 소송 1심에서 패한 것과 관련 “GS칼텍스는 율촌이라는 조세소송 국내 1위의 로펌으로 대응했는데 광주청은 준비서면, 참고서면을 제출하는데 그쳐 패소했다. 재벌과의 소송은 국민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신념을 갖고 국민의 돈을 지키

다는 자세로 제대로 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역 세수에 기여하는 것은 좋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호하고 옹호하는 듯한 대처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근로장려금 확대시행”=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근로장려금이 취지와 달리 국제징수법에 따라 수급대상 가구중 국제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근로장려금에서 공제후 지급하고 있어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광주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 관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많고 세무조사 유예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대해 추궁했다.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 대한 세정 지원을 촉구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도가니’ 분노에... 여야 앞다퉀 ‘성폭력방지법’ 추진

정치권이 영화 ‘도가니’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 분노에 대응하기 위해 앞 다퉈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그동안 장애인 성폭력 범죄 방지에 마려내 적극적으로 없었다는 점에서 생색내기용 ‘뒷북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2010년 10월 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성 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예산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화화교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 2006년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정부도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가 나간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Footer section containing contact information for Seegistar, including phone numbers (1588-8499, 021538-9388), website (www.segistar.co.kr), and various certification logos like FDA, ISO, CE, and GMP.